



제품안전자율이행협약과 전기제품산업의 미래 -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전기제품안전 지킴이 단장
박삼규 단장(現 대한상사중재원장)

지난 7월 13일에 '제품안전자율이행협약'이라는 보다 진취적인 제품안전정책이 산업자원부 주관 아래 전기제품·공산품·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의 협약으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을 수거해 안전성을 조사하고, 유통업소를 불시 점검하는 등 사후 단속형 안전관리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 결과 여전히 유통되는 전기용품의 32%(공산품의 20%)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였다. 이는 전기제품·공산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저가·저질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신제품 출시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게 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비례해



소비자 안전사고도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지난 5월에는 전기압력솔 폭발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금년 8월 14일 대구에서 또 한건의 전기압력솔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7월에는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가 갑자기 폭발해 사회적인 큰 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고, 냉온수기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5살 어린이가 추락사망 등 일상생활에서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전기제품의 안전사고는 화재 등의 막대한 물적·인적 손해를 끼치는 무서운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제품안전관리가 필요시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단속 공무

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후안전규제정책 강화는 오히려 우리 경제와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는 대다수 건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어 시장질서 왜곡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이제는 정부와 건전기업·소비자가 참여해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은 시장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불량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사전에시적(事前豫示的) 제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사후에 이뤄지던 제품안전 감시를 사전 예시제로 대거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전기제품 27개, 공산품 22개 품목을 선정하여 기업에 알리고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마다 중점 관리 품목과 기준은 새로 정해진다. 이것은 정부가 합리적인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안전기준을 제시하면 기업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품안전 지킴이단'이 기업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지킴이단'은 시중 유통 제품의 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해 안전 이행을 약속한 기업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권고는 물론 집중관리대상 품목 선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까지 제품안전관리에 참

여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이뤄질 것이며, 제품안전에 대한 사회분위기 환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안전지킴이단은 전기제품, 생활제품, 어린이용제품 분야 300여 기업들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 자율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들은 협약을 통해 안전 제품 공급을 소비자에게 약속하게 되며, 'VAS 마크(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를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제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한편 정부의 직접 관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민간 자율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기업·소비자·정부 사이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

해 기업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는 자율적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후적 단속보다 효율적이며 시장 친화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게 될 전망이다. 해마다 수입제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전기제품산업에도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전기제품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